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안철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3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5.

발 의 자 : 안철수·강대식·이헌승
최형두·이종배·서천호
백종헌·김상훈·박충권
배준영·권영세·최수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세울 때 식량자급률을 설정·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음.

그런데 적정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는 것은 한 주권 국가의 사회적·경제적 안정에 밀접히 결부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로 목표치 달성 기간을 연장하거나 목표 자체를 하향 조정하는 등 식량자급률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 게다가 식량공급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식량자급 목표의 달성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.

이에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각각 식량안보의 확보와 식량자급률의 달성을 명시함으로써 농지가 식량안보 등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·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 등).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제2호 전단 중 “적정 생산기반”을 “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3항 중 “농업과”를 “농업 및”으로, “발전을”을 “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”로 한다.

제32조제1항 중 “농지가”를 “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	제14조(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, 그 추진계획(<u>적정 생산기반</u> 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)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·개선에 관한 사항.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2. ----- ----- <u>농지</u> <u>등 적정 생산기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
2의2. ~ 6. (생략)	2의2. ~ 6. (현행과 같음)
③ ~ ⑦ (생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31조(농지의 소유 및 이용) ① · ② (생략)	제31조(농지의 소유 및 이용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<p>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<u>농업과</u>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<u>발전을</u>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③ ----- ----<u>농업 및</u>----- ----<u>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</u> <u>를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2조(농지의 보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농지가</u>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32조(농지의 보전) ① ----- -----<u>제14조제3항제1</u> <u>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</u> <u>등을 위하여 농지가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(생 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